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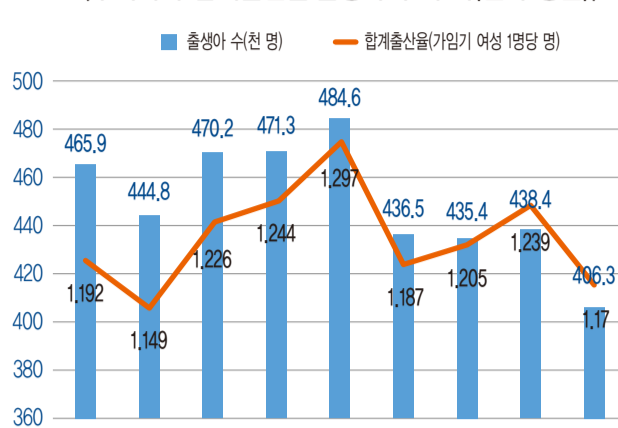
##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

##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, 심각한 수준이다

## ○ 합계출산율-전국 출생아 수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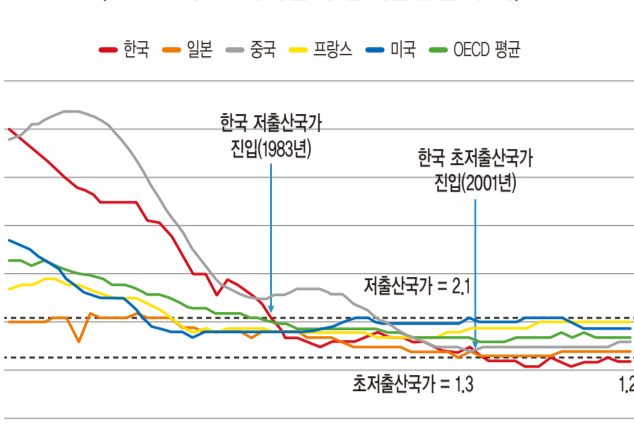
-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당시 46만 명을 상회하던 출생아 수는 8년 후인 2016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고,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.17명으로 하락하였음
-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임

〈우리나라 합계출산율-출생아 수 추이(전국 평균)〉



자료 : 국가통계포털 KOSIS

〈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추이〉



##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현황 및 한계

## ○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법적 근거

-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2006년 「저출산-고령사회기본법」 제정과 저출산-고령사회위원회 출범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, 지방차원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로 여겨져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었음
- 「저출산-고령사회기본법」 제20조에 의해 '저출산-고령사회기본계획'이 수립되고, 제21조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'연도별 시행계획'이 수립 시행됨
- 제3차 저출산-고령사회기본계획(혹은 '브릿지 플랜 2020')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전 기층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, 주거 등 만혼-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,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,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함

〈제3차 저출산-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 내용: 저출산 분야〉

분야	중점 과제	
저출산 분야 (총 89개)	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	고용디딤돌 확대, 정규직 전환,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, 취업성공패키지 확대, 임대주택 공급 증대 등
	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	임산-출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, 난임치료 보험 적용,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, 예방접종 및 정신건강 지원 등
	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	맞춤형 보육 정착, 공공보육 확충,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, 진로교육 강화, 대입전형 개선 유도 등
	일-가정 양립의 일상화	유연·재택근무 확산,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, 육아휴직자 및 지원확대,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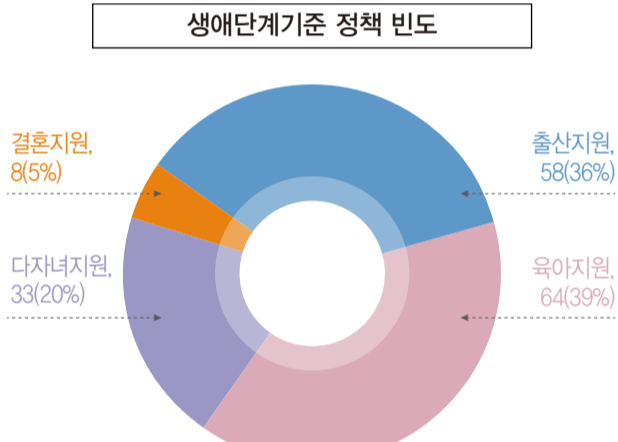
자료 : 제3차 저출산-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계획(2017: 5-13)을 재구성

## ○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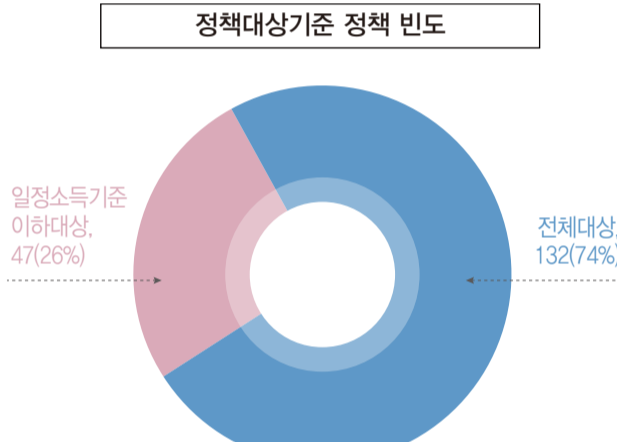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단체는 「저출산-고령사회기본법」에 근거하여 다수의 저출산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, 2017년 현재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1만여 개에 달하는 각종 저출산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
-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시책을 종류별로 정리한 결과, 총 163가지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, 생애단계별로는 육아지원(39%), 출산지원(36%), 다자녀지원(20%), 결혼지원(5%) 순으로 사업의 종류가 많게 나타남
- 정책 대상별로는 일정소득기준 이하 대상 사업에 비해 전체대상 시책이 무려 74%(132개)를 차지하고 있으며, 정책 내용별로 보면, 임산출산비용지원을 목적으로 한 시책이 42개 종류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, 이 외에 보육기관 지원(24개), 의료비지원 (24개), 소득보전(18개), 보육서비스이용지원(14개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통사업(2017년 현재 24.1조원)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예산(2017년 현재 3.46조원)은 현저히 적은 편임

〈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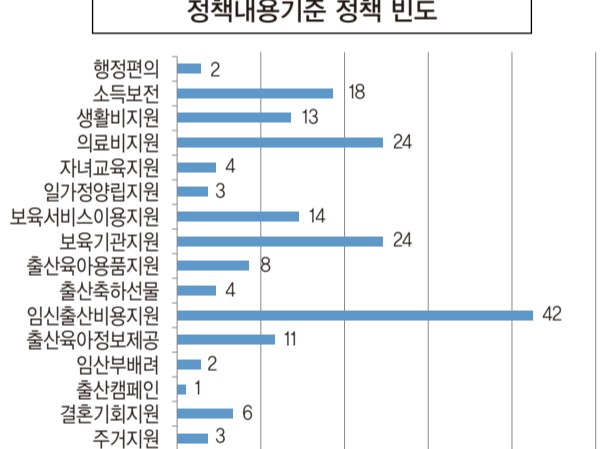
생애단계기준 정책 빈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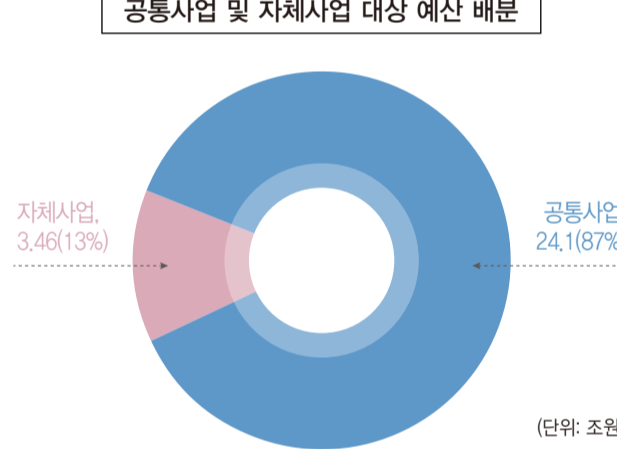
정책대상기준 정책 빈도



정책내용기준 정책 빈도



공통사업 및 자체사업 대상 예산 배분



(단위: 조원)

## ○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한계

- 이미 출산한 대상자들에게 대한 출산지원과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각 지자체 환경에 부합하면서 출산 동기를 부여 하는 고유한 정책이 부족함
- 출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비 경감이나 일가정양립 부담과 같은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미미함
- 한정적 자원 하에서의 보편적 접근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

##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개선 전략

## ○ 저출산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화 핵심 정책에 주력: 정책 대상자들에게 '출산 동기' 부여

- 공급자 중심의 '백화점식'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'전문점식'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
- 각 지역의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을 선별하고, 이들의 저출산 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
- 이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우선순위의 의미일 뿐 여타의 정책 대상이나 정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

## ○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의 확대 필요: 지자체에게 저출산 '정책 설계 동기' 부여

- 공공재의 배분의 주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 방안 설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
- 즉,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스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

## 지역특화 핵심 정책의 예시

## • 결혼준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결혼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임산출산 정책을 특화

- 특히,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과 청년취업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과 결혼기회 제공을 통한 결혼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또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책 - 예를 들어, 직장보육시설 확충 - 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일본 후쿠이현 사례를 참고하자면,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를 위하여 "지역중매쟁이"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인복지협의회에 소속한 지역중매쟁이 200명이 현 내 12개 지구에서 정례상담과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음
-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가 병치료 중인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'환아 데이케어' 제공

## • 결혼 이후 출산 이전의 출산준비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

- 결혼으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이루어졌으나 취업 기회와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-양육 비용을 대폭 낮춰줄 필요가 있음
- 특히,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대와 양육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
- 영국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이나 대학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6세 이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음

## •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육정책과 다자녀지원 정책을 강화

- 특히, 기혼여성의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공육 확대를 통한 교육비 경감과 보육시설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야 함
-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리의시 '에콜 롱게 파리(Ecole Longues Paris)' 시설 운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
- 파리는 교육적 측면과 유아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,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, 도서관과 실내 놀이공간이 한 건물에 위치하여 이동 편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제공과 시설 이용이 가능함